

##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검찰 이화영 회유·압박" 주장

등록 2023.07.24 11:57:47



[수원=뉴스시스] 김종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및 거짓 언론플레이 중단을 촉구하며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3.07.24. jtk@newsis.com

[수원=뉴스시스] 변근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변화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매우 오랫동안 유지하던 진술이 갑자기 반복됐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편지를 보면 (검찰의) 인권침해가 소지가 대단히 크고 절박한 사정을 엿볼 수가 있다"며 "한 사람의 인권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혀도 되냐는 문제의식을 느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하며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에 짜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면, 결국 검찰이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검사,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피의 사실공표는 물론, 반인권적·불법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을 통한 사실의 왜곡과 조작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의원들은 수원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으나, 면담을 이루지 못하고 나와 수원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건 관련 10개월 가까이 일관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있었는데 갑자기 진술태도가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다시 그 내용을 뒤집는 탄원서와 자필 서한이 민주당에 접수됐다"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이 부분을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한 것인데 지검장이 만나주지 않는 것은 뭔가 쟁기는 것이 있어서 만나주지 않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여 분 만에 나온 수원지검 관계자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검사장이 면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최종 입장을 전하면서 면담은 최종 불발됐다.



[수원=뉴스1]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의원들은 "더 이상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입장문을 전달한 뒤 30여분간 더 농성을 이어가다 자리를 이동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한 상태다.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접견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부지사를 만나 직접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바울에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진행된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4차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고, 이후 관련한 언론 보도가 확산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민주당에 자필 탄원서를 내고 "검찰은 아내인 저뿐 아니라 아들 그리고 지역사무장,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등 이화영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검찰에 불러 조사하고 압수 수색을 했다. 남편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그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도 옥중 편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얘기한 바는 있다"면서도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